

## 디지털전환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2021. 7. 22.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추진 배경 .....	1
II. 제도 현황 및 평가 .....	4
III. 기본 추진전략 .....	7
IV.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8
1. 전략적 수요발굴 관리 체계 구축 .....	8
2.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	10
3. 시장 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	15
4.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17

# I. 추진 배경

## 1.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 증대

① 디지털 전환은 기술산업 창출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파괴적 혁신**과 **기존 산업시스템 붕괴\*** 등 거대한 구조개편의 압력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이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고, 美獨 등 선진 8개국에서 1억 600만명 노동자 직업전환 위기 직면 전망(Mckinsey, '21.2월)

②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배출이 많은 자산들의 좌초자산화\***(Stranded Asset) 가능성이 더욱 부각

- \* 투자된 자산으로서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는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IEA)
- 특히, 우리나라는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 전체의 30%) **구조개편의 중요성** 더욱 강조
- \*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17년 부가가치 기준)
- \*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산업 좌초자산은 1,060억 달러 규모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英 카본 트랙커 이니셔티브, '19.3월)

□ 이미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는 변화의 움직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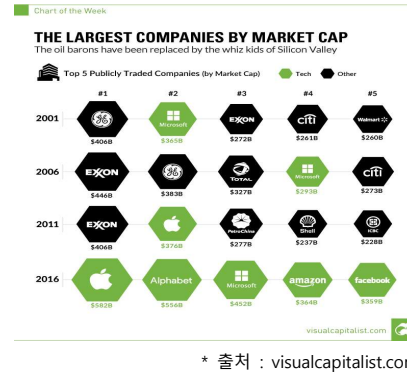
① (금융) 연기금 등의 투자포트폴리오에서 좌초자산을 배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최근 **민간금융사** 등으로도 **확산** 움직임

- \* (예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본격 선언: 저탄소 전환 목표 未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의결권 행사 경고
-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좌초자산이 부각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최근 부진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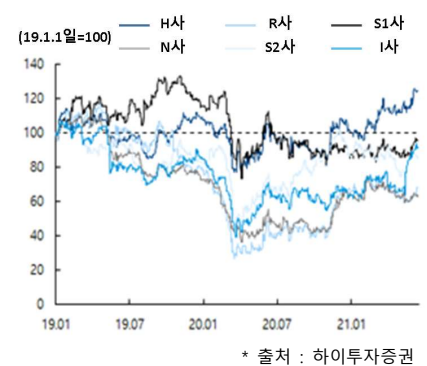
② (산업)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별 구조변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변화** 요구

\* (예시) 유통업 : 오프라인 기반 영업 → 오프라인 매장 무인화, 온라인 플랫폼 강화  
자동차 : 내연기관차 부품社 → 친환경차 부품社 또는 UAM, 로봇 등 기계부품社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기업 변화>



## <좌초자산이 부각되는 기업 주가 흐름>



## 2.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필요성

□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① 사업구조개편 추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는 산업경쟁력 저하와 연계**

- 글로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구조개편 촉진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

② 그간 기업 선택에 따른 **사후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 역량 대폭 강화** 필요

- 기존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현재 변화의 속도 **대응에 한계**
- 現 패러다임 변화는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만큼 **선제적 대응** 시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진입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 선점 가능

⇒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온 現 제도현황 점검** 後 「**새로운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참고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의 개념 및 대상

- (제도) 사전적 구조개편 VS 사후적 구조조정 비교
  - (사전적)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는 정상이나, 향후 예측되는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의 구조·업종 등을 개편하는 행위
  - (사후적) 부실징후기업 또는 부실기업의 재무위험 완화 등을 통한 기업개선 활동

<사전적 VS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 비교>

구분	사전적 구조개편		사후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사업전환	워크아웃	회생절차
관련법률	기활법	중전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기업 (A,B등급)	정상·부실기업 (A,B,C,D 등급)	부실징후기업 (C등급)	부실기업 (D등급)
주요 특징	사업 구조개편에 중점		재무 구조조정에 중점	

###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대상 기업의 범위

- \* (정의) 현재는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으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기존 사업부문의 정리·구조혁신을 전제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신사업 부문으로 진출·혁신
- (법적근거 활용 유무) ①법적 근거를 지닌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는 경우와 ②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
- (추진동기에 따른 구분) ①과잉공급 등 내생적 요인에 따른 경우, ②정부의 정책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 가능

[참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범위 구분 (제도활용 및 추진동기)]			
추진동기		내생적 요인	외생적 요인 <sup>1)</sup>
법적용 여부			
有	기활법상 사업재편	과잉공급, 신산업 진출 등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발적 개편 수요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비자발적 개편 수요
	중전법상 사업전환		
無	금융지원		
	순수 시장 <sup>2)</sup>		

\* 1) 대상범위 확대 및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제기  
 2) 시중은행 대출, M&A, PEF 등을 통한 투자 등

⇒ 이번 대책은 기존 사업재편, 사업전환 제도 외 비자발적 개편·금융지원 수요 기업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업구조개편\*** 대상

   : 이번 대책의 수요발굴 대상이 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의 범위  
   : M&A 활성화 등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 포함

## II. 제도 현황 및 평가

### 1. (수요발굴·관리) 제도·부처별 운용에 따른 한계

- (현황) 제도별로 산업부(사업재편)는 대한상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기부(사업전환)는 중진공을 활용한 수요기업 발굴 추진
  - 적극적인 대상기업 발굴을 위해 산업부는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발족(‘21.5월)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 구축
- (평가) 기업 발굴 단계에서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실질적 인센티브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최근 산업부는 다양한 수요발굴을 위한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제도별 접근에 따른 한계 발생

### 2. (법·제도) 제도적 기반은 마련, but 활성화 제한적

- (현황)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등 선제적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
  - (사업 재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16년 제정)」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산업부)
    - ①과잉공급 완화, ②신산업 진출 및 ③산업위기지역의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대상 승인
    - \* '21.7월 기준, 217개 기업 승인(대기업 9건, 중견기업 50건, 중소기업 158건)
  - (사업 전환) 「중기사업전환촉진에관한 법률(‘06년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환 지원(중기부)
    - \* '16~'20년까지 총 728개 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 \* 중진공 직접대출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해당기업에 컨설팅, 정보제공 등

### < 사업재편 vs 사업전환 제도 비교 >

구분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근거법	기업활력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승인 요건	구조개편 사업혁신 (대상 : 과잉공급,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업종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
지원대상	대·중견·중소기업(재무상태 정상)	중소기업(재무상태 정상·부실)
인센 티브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 지원(대·중견기업 제외)	
	자산매각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우대 지원
	기업분할·합병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상법 상 주요절차 간소화	주식교환 합병분할 영업양수 등에 관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 (평가) 사업재편·사업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인식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제한적

① (수요 부족) 중소기업들은 해당분야의 과잉공급·사양산업화 문제 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응 미흡

- 중소기업들은 既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인센티브 부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서는 창업 수준의 R&D 및 설비투자 등이 요구되나, 상대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불충분

\* 「대한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설문조사(20.5월, 101개사 대상)」 결과

- 78%가 혜택이 불충분하다고 답변/ ①정책자금(34.5%), ②세제(21.8%), ③R&D(21%)

- 특히, 사업재편 수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지원 요건(신용평가 기준 적용)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 지원에 한계\*

\* 기존 사업 침체·신사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상황,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심사로 신규 자금확보가 곤란

③ (제한적 요건) 각 제도에서 정하는 승인요건·대상이 제한적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재편·전환에 대한 법령상 고려가 부족
-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상 승인요건\* 만으로는 일부사업 철회 또는 동일업종내 생산 품목 변경 등의 구조개편 대응 곤란

\* 업종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만 규정

### 3. [시장]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능 부족

□ (현황) 구조개편 투자는 사모펀드(PEF) 등 민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정책형 펀드(모태·뉴딜펀드 등)를 통한 마중물 역할 수행

- 중소·중견기업은 지분투자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펀드 등의 투자수단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경향

□ (평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성장형 펀드, 사후 구조조정 등에 비해 선제적 구조개편에 대한 금융공급은 불충분

\* 모태펀드·뉴딜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기업 투자가 가능하나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등 실제 투자 부진

- 민간자금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 및 위험분담이 미흡하고, 사업구조개편 시 수반되는 M&A 활성화 기반 취약

\* 「사업구조개편 기업=실패 기업」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PEF 등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제한적

### 4. [인프라] 구조개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흡

□ (현황)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미흡

- 현행 제도는 개별 부처별로 운용 중이고, 운용 내용에 대한 부처별 공유가 부족

□ (평가) 부처별 제도 운용으로 인한 통합적 지원에 한계

- 기업들의 사업구조개편 수요를 사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승인기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 ①부처별 기존 법·제도에 국한되지 않는 범부처 통합의 기본 체계 마련 필요

②탄소중립 등 국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개편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자생적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시장친화적 기반 강화

### Ⅲ. 기본 추진전략

#### < 기본방향 >

- ◇ 당면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작동가능한 「통합적·체계적 수요 발굴·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운용
  - ▶ 공공부문은 제도개선 및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 →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인센티브 확대
  - ▶ 범부처 통합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되, 특히 실물부처간 협업 및 금융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목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 구조로의 조기 전환

####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 선제적 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 ① 사업재편·전환 제도 개선
- ② 사업재편·전환 인센티브 강화

##### 시장 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 ① 선제적 구조개편 금융공급 확대
- ② M&A 활성화 지원
- ③ 금융지원 기반 확충

#####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①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② 사업구조개편 통합 DB 구축

### Ⅲ.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1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 ◆ 제도별 수요발굴·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범부처 전략적 수요 발굴·관리 체계(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지원 전담·협의기관 등) 구축

#### 1. 수요발굴 단계

- (사전 수요탐색) 대기업 중심의 업종별 공급망(Supply Chain)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구조개편 필요시점 등 사전 파악
  - \* 공정위 하도급 거래 관계 실태조사 결과, 한국기업데이터(KED)의 판매처·구매처 현황 및 기업여신 현황 관련 데이터 등 활용
  - 지원 전담기관(대한상의) 내 분석팀 신설을 통한 데이터 분석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진단시스템(K-Doctor)”을 활용한 탐색기능 강화
- (수요 발굴)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도 간 칸막이 없이 현장 기반의 광의의 사업구조개편 수요 발굴(pooling)
  - 파트너십은 ①사업재편 파트너기관\*(산업부), ②사업전환 지원센터(중기부), ③정책금융기관(금융위), ④업종별 협회, PEF·VC 등으로 구성
    - \* 현행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생산기술연구원, 중견기업연합회, 산업단지공단, 서울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6개 기관 지정
  -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 정보\*를 기업 동의하에 투자자 등에 제공 → 사업구조개편 기업 조기 발굴에 활용
    - \* (예시) 사업구조개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제도” 활용기업 정보 공유

#### 2. 수요관리 단계

- (통합관리) 대한상의를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수요 발굴·관리를 지원\*
  - \* 발굴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 금융 수단 제안, 제도별 전담기관과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관리 기능 등

○ 「사업구조개편 지원 협의기관」 운영을 통해 발굴된 수요기업에 대한 사전 선별 및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 대한상의 주도, KIAT·중진공 및 정책금융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참여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통해 재무분석·실사 등을 거쳐 미래 성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재편·전환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 진단) 사업구조개편 수요가 발굴된 기업들이 관련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사전 진단·선별(filtering)

- 특히, 내실 있는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도모를 위해 기업 선정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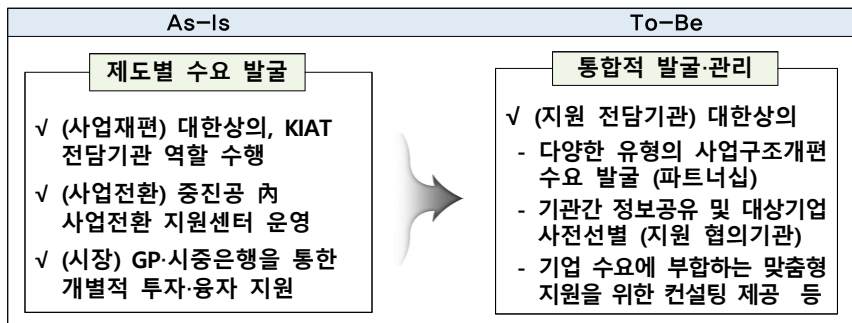
\* (예시) 「한계사업 부문 축소 + 미래성장부문 확대」를 포함한 사업구조개편계획 수립 여부 및 재무개선 계획(자본확충계획, 부채상환계획 등) 평가 등 포함

### 3. 지원 단계

□ (맞춤형 지원) 기업별 특성·수요에 따라 사업재편·전환제도 (승인) 또는 제정·금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요에 적합한 제도와 인센티브 선택·활용 및 사업구조개편 방향 수립·구체화를 위해 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발굴기업 대상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 수요발굴·관리 및 지원체계 변화 >



## 2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 ◆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 마련,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제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구조 개편 실효성 강화

### 1. 사업재편·전환 제도 개선

#### 1. 적용대상 확대 및 통합적 운용

□ (1단계) 단기적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 통합적 연계 운용 강화

- ① (지원대상 확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활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을 지원 대상에 추가(법 제4조 개정 추진, '21년 중)

\* (현행) ①과잉공급 해소, ②신산업 진출, ③산업위기지역 → (개선) 현행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

- (사업전환법)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을 사업 전환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 규정(법 제2조 개정 추진, '21년 중)

- ② (제도간 연계 강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하여 정책효과 제고

- (컨설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컨설팅 병행 추진
- (혜택 연계)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을 양 제도 승인 기업들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단계) 중장기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활법 일몰 도래 前 연장 검토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을 체계화·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한시법(24.8월)인 기활법의 운용 성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일몰 도래 前 연장을 검토 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지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 2050 탄소중립 등 기업들의 지속적 사업구조개편 수요 지원 필요

## 2. 규제완화

- (사업재편 규제완화)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① (규제특례 대상 확대)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필요최소한 범위로 한정

\* ①탄소중립판정위원회(신설)에서 '탄소중립 기술'로 사전에 판정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에 진출하고, ②해당 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신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

<참고> 현행 기활법 상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특례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 3년간 적용 유예
-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공정거래법: 6개월 → 1년)
- 상호출자제한 집단 內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3년간 적용 유예

-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 검토 추진

### ② (공동행위 인가심사)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 병행 추진

\* 공동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참여 사업자 현황, 공동행위가 경쟁 및 관련사업자 및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요청

\*\* 인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사업재편 승인 심사 기간에 불산입

- (사업전환 기간 장기화) 사업모델 혁신 등 새로운 사업전환 유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계획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 (현행) 3년 → (개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 3년 + 2년 연장 가능

- (가업상속공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의 업종변경 관련 승인 제도\*(20년 도입)를 가업상속공제 이후 사업재편·전환 승인받은 기업의 업종변경에 적극 활용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상 업종변경 가능범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內 →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제한 無

## 3.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 전환 지원 강화

- (공동사업재편)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을 활성화하여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력 제고

-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기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재편의 유형,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구체화

- 대·중소 협력사간 또는異업종 기업간 공동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21년 中, 사업전환법 개정안 발의)

- (소기업 지원 강화) 소기업\*의 서류 작성 등 절차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부-중기부 협의를 통한 사업재편 승인 간주 규정\*\* 적극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의 기업

\*\* (기활법 제10조 제1호) 소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이 가능

## 2. 사업재편·전환 인센티브 강화

### 1. 단계별 재정 지원 확대

- (준비단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 ①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②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매니저\*를 매칭하여 맞춤형 정책연계 등 집중 지원

\* 최근 5년간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활용

- (이행단계)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성공률 제고

❶ (R&D 지원)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의 지원규모 확대(‘21년, 100억원)

- R&D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

❷ (자금공급)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지원

- (P-CBO)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P-CBO 보증 지원(‘21년, 1,000억원)
- (중진공 용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 대폭 확충(‘21년, 1,000억원)

❸ (판로개척) 사업 재편·전환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은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판로 지원(‘22년)

\* 온라인 쇼핑물 TV 홈쇼핑 방송 등 온라인 채널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매 지원

❹ (인력전환 지원)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맞춤형 재직자 재교육 지원

- 사업재편 승인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산업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 훈련 지원\*

\*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수·연구진 등 전문가를 섭외 → 교육·실무 훈련 제공

- 사업전환에 따른 재직자 재배치를 위해 중진공 연수사업을 활용하여 직무전환 맞춤 연수\* 프로그램 마련·실시

\*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현장교육(5일 내외)

□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 재편·전환기업의 이행실적 및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 기능 확대

\* (예) ①일정기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목표치와 실제치간 괴리율이 상당한 경우,  
②사업재편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원유지 여부 재검토

○ 사업전환 승인기업 중 매출액·고용 등 우수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매년 50개사)

\* 신성장자금 우대, 수출 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및 우수사례로 집중 홍보

## 2. 세제 지원 강화

□ (과세이연 확대)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 (현행)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를 신산업 진출기업 등에까지 확대\*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게만 등록면허세 50% 감면  
→ (개선)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에게도 적용

□ (재산세·취득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일몰(‘21.12월) 연장 검토

## 3. 유휴설비 처리 등 지원 확대

□ (유휴설비 처리) 사업재편·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처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 가능성 제고

❶ (S&LB)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기존보유 설비 처분·매각시 기업 수요에 따라 캠프를 통해 매입 또는 S&LB 방식으로 지원

\* ‘21년 시범운영 예정으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설비 매각 수요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별·지원

❷ (거래 활성화) 유휴설비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유휴설비 거래 장터’에 모바일 서비스, 공유서비스 도입 등 기능 개선(‘22년)

\* 사업전환 기업에 유휴설비 장단기 임대, 제품 위탁생산 등 정보제공 및 거래 중개

- 국내 수요가 부족한 유휴설비는 수출BI, Kotra 무역관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 지원

\* 유휴설비 거래장터(중고물) 영문홈페이지 제작, 해외바이어 대상 정보제공 등

□ (상생 전환) 대기업집단이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재편 추진 또는 협력업체의 사업전환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검토

○ 공동사업재편·전환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3 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 ◆ 사업구조 개편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M&A 활성화, 금융지원 기반 확충 등 시장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추진

#### 1. 선제적 구조개편 금융공급 확대

- (유자)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적극 지원(‘21년, 5,000억원)

< 사업재편 관련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

- ▶ (개요)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필요자금 지원을 위한 투·융자 프로그램 운용
- ▶ (재원)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기은) 활용
- ▶ (요건) ① 기존 사업부문 관련 설비·공장 등 자산매각, 인력 조정 등 정리·감축  
② 자본 확충, 경영컨설팅 이행,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노력 등 심사

- (펀드) 정책형 펀드의 단계적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원 확대

- ① (사업재편펀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펀드 조성(500억원)

-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계

\* 사업재편 既 승인 기업 + 1년 내 사업재편 승인 예정 기업

- ② (모태펀드)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강화

\* (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스포츠·여가 관련 기업 등, ‘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벤처기업, ‘20년에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등에 한정

- ③ (전용펀드)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 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 검토

- ▶ (투자대상)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 등 목적의 사업 구조개편 추진 계획을 입증하는 모든 기업
- ▶ (구조) 정부재정(기후대응기금 등)과 민간이 출자하는 모(母)펀드 결성 → 모펀드가 하위 자(子)펀드들에 출자  
- 하위펀드는 ①펀드 유형별 출자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대상 기업의 ②업종 등을 고려한 하위펀드 구성도 추진 가능
- ▶ (인센티브) 수익성 보강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 상향 조정 또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 하향조정 등 검토

- 대·중소기업 상생가치 달성을 위해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펀드\*”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하위 펀드 구성 추진

\* 총 2,000억원 규모로 ‘21.2월 既 조성(현대차 300억원, 기타민간 600억원, KEIT 300억원, KIAT 2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및 정책형 뉴딜펀드 500억원 출자)

#### 2. M&A 활성화 지원

- (M&A 활성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이행 지원

- ① (자금 지원)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모태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0.1→0.2조원 수준)

- ② (중개 활성화) M&A 지원센터를 추가 지정(現 7개)하고 센터와 M&A 플랫폼\*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 (예시) M&A 거래정보망(중기부) 등

- ③ (세제지원)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

- 공동사업재편에 따른 자산양도시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1년)

\*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기간

-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M&A시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검토

#### 3. 금융지원 기반 확충

- (금융지원 기반) 투자 저변 확대 및 위험 저감 등을 통한 금융 공급 기반 확충

- ① (저변 확대)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

- 금융투자업계(PEF/VC 등) 대상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IR 지원**\*
- \* 뉴딜펀드 투자 설명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년에 2차례 정기 개최 방안 검토
-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경영권 부담 완화**를 위한 메자닌 등 **복합금융투자 기법 도입 방안 마련**

## ② (위험완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정책금융 재원을 활용한 리스크 저감 등 민간의 위험분담 추진

- 장기적으로는 투자 성과에 비례한 공공 출자비용 조정 및 민간 수익률 제고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검토

- (기업금융 모니터링) 산업구조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태 조사·DB·사후관리 등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1.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범부처 협의체)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및 실물·금융 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 ① (구성)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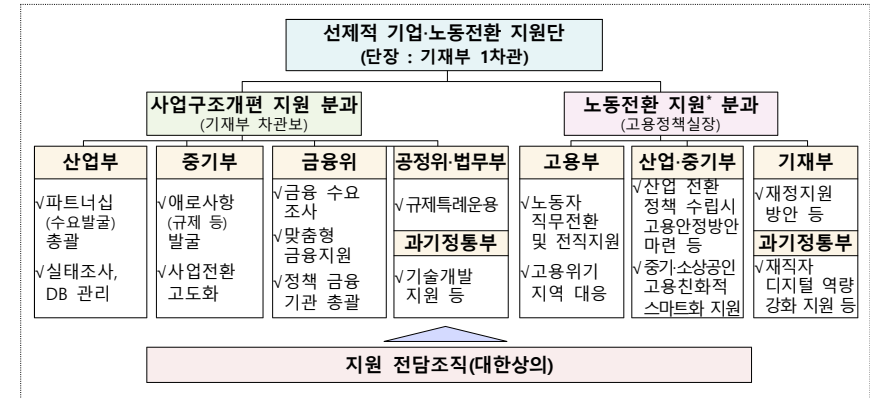
-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분과위원회 설치

#### ② (기능)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 수요 발굴·관리 체계 구축, 제도의 전략적 활용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다만, 법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되는 사업재편·전환 심의·승인 등 고유 절차 유지

<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서 상세 설명

## 2. 사업구조개편 통합 DB 구축

- (실태조사) 기업별 재무 상황, 업황 등을 포괄하는 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정기적)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상시적 수요 파악

\* 중견기업실태조사(중견聯),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중앙회) 등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혹은 신사업진출을 추진 또는 계획하는 기업 위주로 중점 조사대상 선정

- 산업부가 주도, 산업연구원 및 지방 산단과 연계 등을 통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항목) 최근 3년간 재무성과 추이, 투자 및 고용 동향,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 가동률, 재고율 등

- (DB 구축)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하여 DB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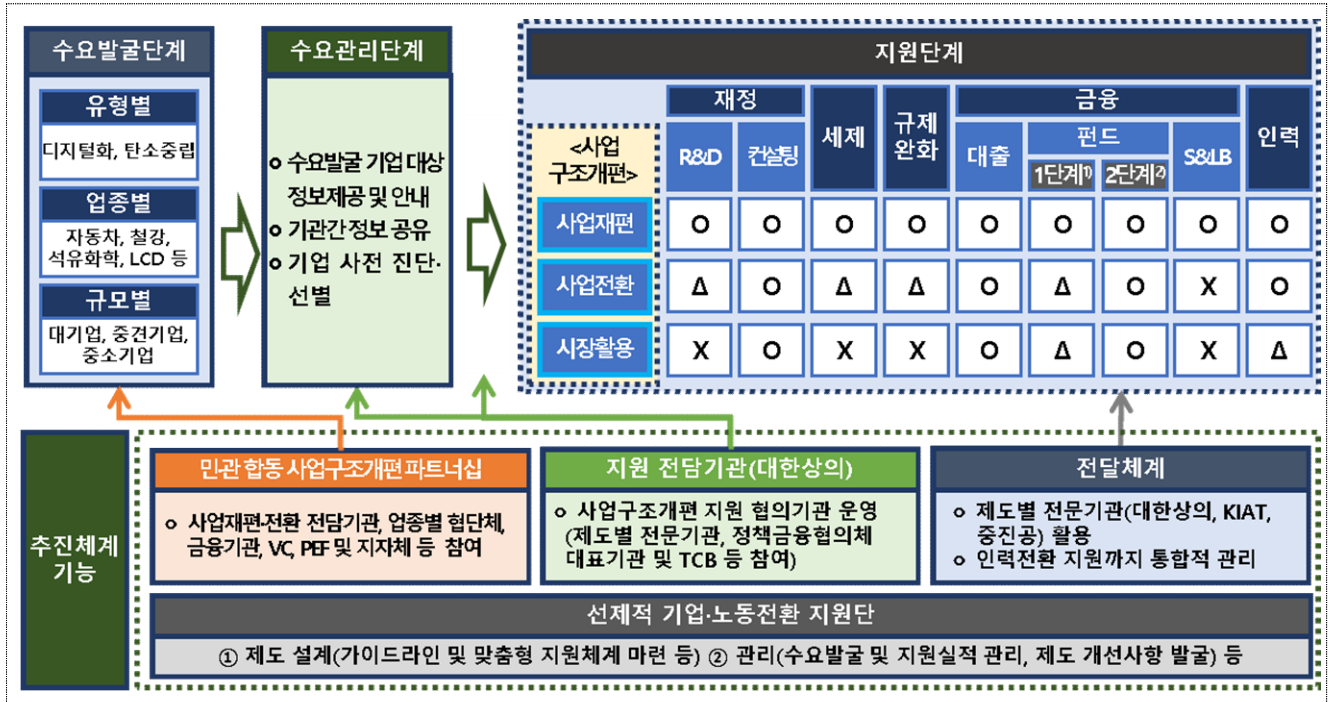
- 축적된 데이터를 관련 기관 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

- (사후 관리)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원기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전담기관 - 지원 기업간 양방향·실시간 소통, 체계적 관리

## 참고 1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 1) 사업재편펀드 및 모태펀드 활용 / 2)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 / △ : 지원대상이 제한

## 참고 2

## 주요과제 추진 일정

기본방향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수요 탐색	'22	산업부
	기업진단시스템(K-Doctor) 구축·활용	'21.4분기	중기부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구축	'21.4분기	기재부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축적된 정보 공유방안 마련	'21.4분기	금융위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개시	'22	산업부
	「사업구조개편 지원 협의기관」 발족	'22	산업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사전 진단·선별 기준 마련	'21.4분기	산업부 금융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	계속	산업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기활법·중전법 상 지원대상 확대(법 개정 추진)	'21.4분기	산업부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제도간 연계 강화	계속	산업부 중기부
	컨설팅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계속	산업부 중기부
	규제특례 대상 확대(기활법 개정 추진)	'21.4분기	산업부 공정위
	공동행위 인가심사 병행 추진	계속	공정위
	사업전환 지원요건 유연화(사업전환법 개정안 제출)	'21.4분기	중기부
	재산평가심의위를 통한 가업상속공제 후 업종변경 승인	'21.4분기	국세청 산업부
	공동사업재편 관련 기활법 시행령 개정	'21.4분기	산업부
	공동사업전환 지원제도 신설(사업전환법 개정안 제출)	'21.4분기	중기부
	소기업 지원강화	계속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규모 확대	'21.4분기	기재부 산업부
	P-CBO 보증 지원	'21.3분기	금융위 산업부

	▶중진공 사업전환 용자지원 자금 확충	'21.4분기	기재부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21.4분기	중기부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22년~	산업부 중기부
	▶사업전환 승인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21.4분기	중기부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 확대(세법 개정안)	'21.4분기	기재부
	▶등록면허세 적용 사업재편 범위 확대(지방세법 개정안)	'21.4분기	행안부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감면 일몰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21.4분기	행안부
	▶S&LB 방식 지원	'21.4분기	금융위
	▶유희설비 거래장터 기능 개선	'22	중기부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재편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21.4분기	중기부
시장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사업구조개편 전용 용자 프로그램 조성	'21.3분기	금융위
	▶사업재편 펀드 운용 개시	'22.1분기	산업부 금융위
	▶버팀목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개정	'21.4분기	중기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지원 전용 펀드 조성	'23	기재부 금융위
	▶M&A 지원센터 추가 지정	계속	중기부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21.4분기	기재부
	▶사업구조개편 기업 IR 지원	'22	금융위
	▶중소기업에 대한 복합 금융투자 기법 도입 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금융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1.4분기	금융위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범부처 협의체 구축	'21.3분기	기재부
	▶기업 실태조사 실시	계속	산업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22	산업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화	'22	산업부